

삼성전자 지원 中企 99곳, 스마트공장 혁신 기술력 뽐내

중기부 '스마트 비즈 엑스포'

삼성, 중기 3369곳 스마트공장 지원 수출 등 4개 특별테마관 중심 전시 전기밥솥 메뉴에 떡 밀키트 연결 웬떡마을-쿠첸 등 협업사례 소개

삼성전자로부터 스마트공장 구축에 필요한 기술 등을 지원받은 중소기업들이 혁신 결과물을 뽐냈다.

2015년부터 동반성장의 하나로 '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사업'을 추진해 온 삼성전자는 올해까지 협력·비협력 중소기업 총 3369곳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지원하고 있다.

22일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에 따르면 이날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 스마트 비즈 엑스포'가 개막했다. 오는 25일까지 나흘간 열리는 이번 행사는 '대·중소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의 성과를 확산하고 중소기업에게 새로운 판로개척의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했다.

엑스포에는 삼성전자의 지원을 받아 스마트공장을 구축한 생활가전, 식품·음료, 생활용품, 기계설비, 산업용품,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중앙회, 삼성전자는 22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2024 스마트비즈엑스포' 개막식을 가졌다. (왼쪽 3번째부터)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오영주 중기부 장관,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등 참석자들이 세리머니를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

부품소재 등 업종별 중소기업 99개사가 참여했다.

행사는 ▲교차협력1·2관 ▲혁신관 ▲수출관의 4개 특별 테마관 중심의 전시, 국내외 바이어와의 비즈니스 매칭을 위한 구매상담존, 생방송으로 실시간 구매상담을 지원하는 라이브커머스 스튜디오, 현장리포트, 상생마켓 등으로 구성했다.

교차협력관에선 전기밥솥 메뉴에 떡 밀키트를 연결한 웬떡마을(약밥, 떡볶이)과 쿠첸(전기밥솥), 전지자동차와 배터리기업의 교차 협력을 이룬 형제파트너(전기자동차)와 씨티엔에스(배터리팩) 등 지원 기업 간 협업을 통해 시너지를 창출한 사

례 5건(총 11개사)이 소개됐다.

혁신관에는 제조현장 혁신지원으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한 산정토기와(전통기와)와 한서정공(특장차)이 참여했다.

또한 판로 개척 지원으로 해외수출 역량 등을 확보한 예바(전기차충전기), 백제(건면), 메디오스(콘택트렌즈)는 수출관에 참여해 제품을 선보였다.

중기중앙회는 별도 부스를 운영하며 상생형 스마트공장 사업 안내 및 상담을 진행하는 한편, 사업참여 도입·공급기업을 위해 중기중앙회에서 제작한 업무메뉴얼 및 브로셔 등도 배포했다.

첫 날 개막식에는 고동진 국민의힘

의원, 오영주 중기부 장관, 정윤모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박승희 삼성전자 사장, 이달곤 동반성장위원장 등이 참석, 우수한 기술력과 혁신의지로 스마트 제조혁신 미래를 열어가는 데 큰 역할을 하고 있는 중소기업인들의 성과를 격려했다.

정윤모 상근부회장은 "대중소 상생형 삼성 스마트공장 지원사업"은 대기업의 제조혁신 경험과 노하우를 중소기업 현장에 전수하는 상생협력의 대표적인 모범사례로, 특히 올해부터는 스마트공장 '고도화' 집중 지원과 함께 지자체 협업사업, 식품업 지원사업 등을 신설하고 ESG 역량 강화를 지원하는 등

중소기업에 큰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삼성에서 축적해온 경험과 노하우를 적극 공유하고 정부와 국회에서도 대·중기 간 상생협력 차원에서 중소기업 지원정책이 지속 추진될 수 있도록 관심과 지원을 부탁한다"고 전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2018년부터 올해까지 삼성전자, 포스코 등 대기업·공공기관 지원금과 정부 예산 등 총 3110억원의 돈을 투입해 총 5951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구축을 돕고 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은 디지털 전환으로 기술 경쟁력을 높였으며, 이를 지원한 대기업은 안정적인 공급망을 확보하게 됐다.

오영주 장관은 "우리 중소기업이 내수 시장의 한계를 넘어 글로벌 시장으로 진출하기 위해선 스마트제조혁신이 필요하다"면서 "미래를 만들어가는 지속 가능한 동행"이라는 이번 엑스포의 슬로건에 걸맞게 정부는 스마트공장을 통한 제조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이를 뒷받침하는 제조 전문기업을 육성해 중소기업과 스마트제조 전문기업이 함께 성장하는 지속 가능한 생태계를 조성하겠다"고 강조했다.

/김승호 기자 bada@metroseoul.co.kr

"입점사 주먹구구 선정에 '티메프 사태' 피해 키워"

중기부 산하기관 국감

"티메프 사태, 정부정책의 실패" "온누리 상품권, 내수 살리기 한계 지류형 부정유통 141억... 보완을"

22일 열린 중소벤처기업부 산하기관들에 대한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국정감사는 '티메프' 사태와 온누리상품권 문제 등이 주요 이슈로 다뤄졌다.

서왕진 의원(조국혁신당)에 따르면 중소기업유통센터가 티몬, 위메프 등에 입점 지원한 3678개사 중 미정산업체는 지난 6월 23개사에서 9월 현재 1662개사로 늘었다.

서 의원은 "티메프 사태는 정부 정책의 실패다. 온라인 플랫폼 기업의 위험을 제대로 알지 못한 채 피해금만 엄청나게 증가했다. 중기부도, 산하기관들도 무거운 책임감을 느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태식 중소기업유통센터 대표는

"죄송하다"면서 "피해기업들이 극복할 수 있도록 열심히 지원하고 판로지원 기관으로서 추가 지원이 어떻게 가능한지 찾아보겠다"고 답했다.

나경원 의원(국민의힘)은 "중기유통센터에서 하는 온라인 쇼핑물 판로 지원사업의 취지는 좋다고 생각한다"면서 "그러나 입점 기업의 기준을 너무 주먹구구식으로 선정했고, 심지어 초기엔 공모가 아닌 협약 형태로 진행했다. 그렇다보니 (문제가 된) 위메프와 티몬이 상대적으로 지원을 많이 받았다"고 꼬집었다.

나 의원이 중기유통센터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티몬은 2020년부터 올해까지 4억6000만→3억9000만→17억6000만→3억4000만→1억6000만원의 예산을 지원받았다.

위메프에도 이 기간 6억2000만→8억8000만→17억5000만→0원→7000만원의 지원금이 돌아갔다. 2020년부터 2023년까지는 공모가 아니라 협약을 통해서

계약이 이뤄졌다. 위메프의 경우 2020년부터 자본잠식 상태였고, 티몬 역시 부채비율이 120%를 훌쩍 넘어섰다.

박형수 의원(국민의힘)은 중기유통센터가 이들 업체를 지원하면서 신용상태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것이 잘못이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해당 업체들의 유동비율이나 현금성 자산 비중 등 신용상태를 사전에 확인했다면 (티메프)사태는 막을 수 있었을 것"이라며 "모니터링이 부족했던 것에 대해 기관의 근본적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온누리상품권이 소상공인 상권 살리기를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지역화폐를 통해 보완해야 한다는 요구도 있었다.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이 중기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한 달 간 온누리상품권 업종완화 신규 가맹점은 약 4544곳으로, 한달 간 신인 결제액은 2억77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

규 가맹 등록장 수는 전체의 8% 수준으로, 결제액도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결제액 3조563억원 대비 미미한 수준으로 나타났다.

김 의원은 "근본적으로 업종완화 대상 4500여 곳 추가한 것만으론 내수 살리기에 한계가 있다"며 "효과가 없는 것이라고 본다"고 꼬집었다.

지류형 온누리상품권의 부정유통에 대한 지적도 나왔다.

박지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지난해 온누리상품권 부정 유통 적발이 85건, 141억4000만원에 달하는데 대부분 지류에서 발생했다"며 "이런 점을 인지해서 디지털 상품권 발행했는데 비중이 35%밖에 안된다. 소비자 편의를 위해서라도 개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박성호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이사장은 "동의한다"며 "그래서 카드형 모바일 통합해서 운영하고, 조폐공사 용역을 통해 해법을 찾으려고 한다"고 설명했다. /김승호 기자



세종특별자치시시의 중소벤처기업부 청사.

중기부 외국인 의료특구 대상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

정부가 외국인 의료관광을 위한 지역특구에 이들을 위한 외국어 의료광고 허용키로 했다.

중소벤처기업부는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지역특화발전특구 내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 허용 규제특례 신설을 위한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지역특구법) 일부 개정법률안이 22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2004년 도입한 지역특화발전특구는 지역균형발전과 지역경제 활성화, 지역특화산업 육성 등을 위해 지역특성에 맞는 선택적 규제특례를 허용하는 구역이다. 현재 143개 시군구에서 176개 특구가 운영 중이다. 현행 의료법 제 56조에 따라 의료인 등은 외국인 환자 유치를 위한 국내광고를 할 수 없다. 의료해외진출법 특례로 공항·항만, 면세점 등 6개 구역에서만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개정안은 외국인 의료관광 증가와 관련 지역산업 육성을 위해 외국인 의료관광 관련 특화사업을 하는 자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경우 해당 지역특화발전특구에서 외국어 표기 의료광고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신설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김승호 기자

동반성장위 '공급망 ESG' 관련 연수과정 진행

대기업·공공기관 대상 실시

동반성장위원회가 22일부터 23일까지 이틀간 서울 중구 LW컨벤션에서 대기업·공공기관 ESG 담당자와 'EU 공급망 실사 지침 및 글로벌 ESG 정책 환경변화 대응'을 주제로 연수과정을 진행한다.

동반위에 따르면 이번 연수는 유럽 연합(EU) 공급망 실사 지침에 효과적

으로 대응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고, 각사의 추진 사례를 공유하는 자리다.

주요 연수 내용으로는 ▲공급망 ESG 관리 필요성 ▲글로벌 공급망 ESG 정보공시 및 규제 동향 ▲EU 공급망 실사 지침의 주요 내용 및 해석 ▲RBA(책임감 있는 산업연합)와 에코바디스 등 글로벌 ESG 기준 활용 ▲참여 기업 및 협력사 ESG 추진사례 발표 등으로 구성했다.

동반위는 이번 연수를 통해 참여기업에 실질적인 전략과 실무정보를 제공할 계획이다.

특히 기업들이 글로벌 공급망 ESG 실사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급망 ESG 관리 가이드라인'도 공개한다. 지난 2021년에 개발한 '중소기업 ESG 표준 가이드라인'과 더불어 공급망 ESG 관리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아울러 날로 강화되고 있는 글로벌 ESG 규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기업별 ESG 관리기법을 소개하고 우수사례를 벤치마킹했다.

박치형 동반위 운영처장은 "국내 기업들이 공급망ESG에 개별적으로 대응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면서 "공공부문에서 정보와 가이드를 제공해 주고 상호 전략을 논의하는 장을 적극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한편 동반위는 지난 2021년부터 협력사ESG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김승호 기자